서울시, 직군·직렬 폐기… 고위공무원 문호 넓어진다

민선 7기 인사 운영방안

직원들 공감 '통합승진제' 도입
기피부서 3년 근무땐 특별승급

서울시가 직군·직렬 구분을 없앤 통합승진제를 도입한다. 기피부서에서 3년 이상에서 근무한 직원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선 7기 인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공직 개방성 확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등의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3급(국장급)으로의 승진심사에 직렬·직군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일반직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합승진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직렬 단위의 승진체계에서는 행정, 토목직 등 대규모 직군만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했다. 통합승진제도로 인해 이제 소수직렬 직원도 업무역량과 성과를 내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

2~4급 직위에는 행정직과 기술직 자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교차 보임을 통해 융합형 우수간부를 적극적으로 발탁한다.

주요 난제에 대한 시책 담당자를 공개경쟁으로 선발해 사업을 성공시킬 경우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시·구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한다.

우수 성과자에 대한 인사특전도 크게 확대된다. 격무·기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전문관(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의 수행자)으로 선발돼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성과검증을 거쳐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준다.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안정적으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5년간 업무실적평가가 우수한 임기제는 추가 채용 없이 5년간의 기간연장(5년+5년) 기회를 준다.

시는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하에 2022년까지 임기제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민간근무경력 보유자, 전문경력관 등 300여명의 연차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간 관리자인 5급(팀장급)에 대한 보직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그동안 5급 공채에 대해서는 정규임용과 동시에 팀장보직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실무사무관으로 1년간 업무역량을 기른 후 팀장 직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5급 팀장은 본청 4년, 사업소 7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순환전보를 해야 한다. 선호직무에 장기근무하고 기피부서에서는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훼손됐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시는 일·가정 양립과 공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근무 활성화', '4급이상 1인 1유연근무제', '집단 유연근무제(반기별 1회 집단 조기퇴근) 실시'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민선 7기 인사운영 방안은 기존에 서울시가 추구해 온 인사의 '전문성', '개방성', '유연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직원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서울시 인사 전반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 시민들에게 한층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용도지구 56년 만에 재정비

도시계획 변경안 공개·의견조회

방재지구 등 4개 지구 우선폐지
폐지지구 면적, 서울 43% 차지

서울시가 '용도지구' 재정비에 나선다. 지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규제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용도지구는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다.

서울시는 6일부터 14일 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면적은 80.2㎢으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를 차지한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 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번 폐지되는 용도지구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 내년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43년 만에 개방된 경복궁 영추문 6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 개방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개문의식을 하고 있다.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은 1975년 복원 이후 43년 만에 전면 개방다. 이로서 경복궁은 남쪽 정문인 광화문, 북문인 신무문, 동쪽 국립민속박물관 출입구를 포함해 사방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내년 17개 시·도 공무원시험 한날 치른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시험일 발표

내년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가 같은 날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른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 필기시험일을 발표했다. 17개 시·도는 필기시험을 9급 6월 15일, 7급 10월 12일에 실시한다.

시·도별 선발 예정 인원, 응시 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2월까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작년까지 서울시와 다른 16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일정이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시를 포함 17개 시·도가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른다. 중복합격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일정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지만,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정보다 일찍 시험 일정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4년내 일자리 44.8만개 만든다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경기도가 2022년까지 44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6일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 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 마켓 운영 등의 전략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애로 처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공공 인프라 조성, 도시 재정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에 모두 607개의 과제를 추진해 44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경기도는 특히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인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등 안전·공정·정의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도 만든다.

대책본부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일자리 사업 관련 실·국장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대책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책본부 내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둬 분야별 사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시·군과는 '경기도-시·군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한다. 이밖에 경기도는 도와 31개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가 일자리 정책을 협의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인 '일자리 정책 마켓'을 운영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책 마켓은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 사업 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도비 지원 등 경기도가 구매해 다른 시·군으로 확산을 꾀한다. 반대로 경기도가 발굴한 사업은 사업비 매칭 비율이나 참여방식 등을 고려해 시·군이 선택적으로 구매해 도입하는 방식이다.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종합계획은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와 자영업 부진에 따른 고용 충격을 덜어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여러 분야에 이삭줍기식 일자리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돈의문 전경. /서울시

"돈의문, AR로 만나요"

문화재청 '돈의문 프로젝트'

조선시대 한양도성 4대문 중 하나로 1915년 일제에 의해 철거된 돈의문이 증강현실(AR)로 104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다.

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돈의문은 일명 서대문이라고도 한다. 1396년 완성돼 몇 차례의 중건을 거쳤다.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로확장을 이유로 철거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복원을 시도했지만 교통난, 보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복원되지 못했다.

시와 3개 기관은 고증 작업, 디지털 작업을 진행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2019년 돈의문이 철거됐던 시기인 6월까지 복원을 완료,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오늘 여성 일자리 포럼 개최

여성정책 연구자 등 100여명 참석

경기북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2018년도 경기북부 여성 일자리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여성일자리 관련 이슈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경기북부에 적합한 발전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여성정책 연구자,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조 강연으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가 참여해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날 열띤 논의의 장을 열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적 여성기업의 이해',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현황', '경기북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및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신하영 연구위원, 경기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기승 팀장, 쿱비즈협동조합 박건영 이사, 대체인력뱅크 조지연 상무 등이 나선다.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여성인력의 질적·양적 활용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현장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